광주시 ‘차이나 프렌들리’사업 본격 시동

민간분야 인적구성 마무리
오늘 대중국 교류협 첫 회의
내년 중국문화원 분원 유치

광주시가 ‘중국과 친해지기’ 사업을 이끌 민간분야 인적구성을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간다.

광주시는 25일 “대중국 교류 기관 간 정보교환 및 교류협력 확대, 교류에 따른 불편사항 해소를 위해 ‘대중국 교류협의회’를 구성·운영한다”고 밝혔다.

교류협의회는 문화·관광·체육·경제 등 각 분야에서 대중국 교류활동 실적이 있는 민간 사회단체, 국제교류단체, 대학, 문화기관 관계자를 비롯한 광주의 우수 의료기술을 활용한 의료관광이 연계될 수 있도록 병원, 호텔, 관광업계 관계자 등 총 30명으로 구성됐다.

시는 26일 오후 2시 시청 세미나실에서 첫 번째 회의를 열고 민간교류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사업과제를 발굴·지원할 계획이다.

현재 광주지역 내 주요 민간·공공기관에서 최근 2년간 대중국 교류에 나선 곳은 광주상공회의소와 광주관광협회 등 5개 공공기관, 한국청소년광주시연맹, 광주YMCA 등 7개 민간단체, 5개 지역대학, 14개 초·중·고교 등 총 31개 기관에서 중국과 분야별로 교류 중이다.

시는 이와 함께 2015년내에 중국문화원 광주분원 유치를 마무리하는 한편 관절, 심장, 암 분야 등 광주지역 우수 의료기술을 활용한 중국 의료 관광객 유치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시는 특히 중국인에게 친근감을 줄 수 있는 중국풍의 친화적 랜드마크 및 대중국 문화교류 상징공간 조성을 목표로 내년 8월까지 ‘차이나거리’ 조성 기본계획 용역을 진행하고,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차이나거리 조성을 구체화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이 밖에도 중국을 대표하는 국민 음악가인 정율성 선생을 테마로 한 관광자원 발굴, 무안국제공항을 활용한 중국지역 정기성 전세기 취항 확대 유치 등 다양한 대중국 프로젝트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광주시 관계자는 “중국과의 교류 강화를 통해 광주의 관광 및 쇼핑, 의료, 식·숙박 산업 등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각종 시책을 마련중에 있다”면서 “대중국 교류기관 및 민간단체와의 정보교환 등 긴밀한 협조 체제를 구축해 시민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중국발 경제효과를 이끌어 내겠다”고 밝혔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개인정보 보호기관 전남도 ‘우수’

행자부, 422개 공공기관 진단

보건복지부, 특허청, 전남도, 서울 구로구, 대구도시공사 등이 올해 개인정보보호 우수기관으로 뽑혔다.

반면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 중 개인정보보호 관리가 가장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자치부는 25일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 등 422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올해 개인정보보보 관리수준 진단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오는 26일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포털(www.privacy.go.kr)에 공개한다”고 밝혔다.

개인정보 관리체계, 보호대책, 침해사고대책 등 3개 분야별로 진단한 결과 중앙부처에서는 특허청과 보건복지부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전남도와 서울 구로구가, 지방공기업 중에는 대구도시공사가 각각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반면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 가운데 관리체계구축과 보호대책 분야 모두에서 유일하게 ‘미흡’ 평가를 받았다. 광역 자치단체 중에서는 미흡 평가를 받은 곳이 없었다. 관리체계 분야에서는 경기관광공사 등 9개 지방공기업과 서울 서초구 등 59개 기초지자체가, 보호대책 분야에서는 부산관광공사 등 5개 지방공기업과 서울 용산구 등 21개 시군구가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시환경공단 등 34개 지방공기업과 서울 중구 등 99개 시·군·구는 침해사고대책이 미흡하다는 진단이 나왔다. 행자부는 이번 진단 결과를 정부업무평가, 지자체합동평가, 지방공기업평가 등 기관평가에 반영하고 각 기관이 개선계획을 이행하는지 점검해 개인정보보호 수준이 향상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또 내년부터 중앙부처 산하기관을 포함해 전 공공기관(726개)으로 진단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지난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수목원법)’안이 가결되면서 순천만정원이 대한민국 제1호 국가정원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사진은 하늘에서 본 순천만정원 전경. 〈광주일보 자료사진〉

순천만정원 국가정원 지정 9부 능선 넘었다

국회 법사위, 수목원법 통과
내년 상반기 1호 지정 기대

순천시 오천동 순천만정원의 대한민국 제1호 국가정원 지정이 9부 능선을 넘었다.

25일 순천시에 따르면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순천만정원의 국가정원 지정을 위한 관련법인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수목원법)’안이 가결됐다.

이에 따라 수목원법 개정에 대한 절차는 국회 본회의 상정과 의결을 남겨두고 있다.

국회 본회의 의결은 29일로 예정돼 있다. 이날 본회의 의결이 순탄하게 이뤄질 경우 순천만정원은 내년 상반기 국가정원 1호로 지정된다.

앞서 수목원법 개정안이 국회의결을 통과되면 주무부처에서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마련하고 국가정원 지정을 위한 절차에 들어간다. 또 정원산업 촉진을 위한 각종사업과 이와 관련된 국가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다.

순천시는 ‘순천만정원은 국가정원 1호’라는 명성과 국내·외 홍보 마케팅으로 대한민국 정원문화의 선도 도시로 거듭날 것을 기대하고 있다.

순천만정원은 지난 4월20일 영구 개장한 후 대한민국 대표 힐링의 명소로 각광받고 있다. 개장한 뒤 350만명의 관람객이 다녀갔다.

/순천=김은종기자 ejkim@kwangju.co.kr

4대강·자원개발로 공기업 빚 32조↑

국회 입법조사처, 7개 공기업 부채 357조

4대강 사업과 해외 자원개발 등의 영향으로 지난 2008년 이후 주요 공기업에서만 부채가 32조원 넘게 늘어났다는 분석이 나왔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25일 ‘공공기관 재무건전성 제고를 위한 과제’ 보고서를 통해 부채규모 상위 7개 공기업(토지주택공사·전력공사·가스공사·도로공사·석유공사·철도공사·수자원공사)의 재무 자료를 분석해 이같이 밝혔다.

분석 대상 7개 공기업의 부채는 지난해 말 기준 357조2000억원으로 전체 공기업 부채의 95%를 차지한다. 평균 부채비율은 245.3%에 달한다.

이 가운데 가스공사의 부채는 34조7000억원으로 5년 전(17조9000억원)의 약 2배가 됐다. 특히 해외 투자에서 7조4000억원의 부채가 늘었으며, 이는 대부분 자원개발 사업에 쓰였다고 보고서는 분석했다.

가스공사와 함께 해외 자원개발에 뛰어든 석유공사는 같은 기간 부채가 5조5000억원에서 18조5000억원으로 약 3배가 됐다. 5년간 캐나다 하베스트사 인수 등 자원개발에 끌어다 쓴 빚이 14조8000억원에 달했다.

수자원공사는 부채 증가율이 훨씬 가팔라 2008년 말 2조원에 불과하던 게 지난해 말 14조원으로 7배가 됐다. 4대강 사업에 7조4000억원, 경인아라뱃길 사업에 2조5000억원을 각각 조달한 결과다.

이자보상배율(영업이익/이자비용)이 1보다 낮아 이자 갚는 것도 벅찬 전력공사 역시 해외 원자력개발 사업, 아랍에미리트(UAE) 원전 사업 관리 등이 부채 증가의 한 요인이라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이처럼 전임 이명박 정부 때 역점 추진된 4대강 사업 및 아라뱃길 조성과 해외 자원개발 등으로 32조1000억원의 빚을 공기업들이 떠안게 됐다는 분석이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北 노동당 통일전선부장 김양건 朴정부 관계개선 진정성 이해”

북한 김양건 노동당 통일전선부장 겸 대남비서가 우리 정부의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진정성을 이해한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김성재 전 문화부 장관은 25일 “어제 개성공단에서 만난 김양건 비서에게 박근혜 정부의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진정성에 대해 설명하자 김 비서가 이해한다고 답했다”고 전했다.

김양건 비서의 반응은 남북관계 경색의 책임을 남측에 돌리며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을 비난해 왔던 지금까지 북한의 태도와는 거리가 있다.

이에 김 전 장관은 “김정은 체제가 3년이 지나 자신감이 붙으면서 국면 전환이 이뤄지는 것 아니겠느냐”면서 “앞으로는 북측도 좀 더 유연하게 나올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앞서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는 지난 20일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 “지금 괴뢰패당의 대북정책은 북의 변화와 붕괴에 기본 초점을 두고 있다”면서 “남조선 당국의 대결정책이 변하지 않는 한 북남관계 개선이 이뤄질 수 없다”고 비난한 바 있다. 김 전 장관은 또 김양건 비서가 남북관계 개선의 희망을 피력하면서도 “대북전단 살포 문제를 따로 언급하지는 않았다”고 전했다. 김 전 장관은 전날 김 비서를 만나고 돌아와 기자들에게 “김양건 비서가 ‘내년이 6·15 15주년인데 남북관계가 정말 좋아지길 바라고 있다’고 했다”면서 “김 비서는 금강산 관광, 5·24 조치, 이산가족 상봉 등 문제에서 소로(小路)를 대통로로 만드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고 전한 바 있다.

김 전 장관은 김대중평화센터 방북단의 일원으로 전날 개성공단에서 김양건 비서를 만났다.

/연합뉴스